

전북 'JST 공유대학' 본격 운영 돌입

올해 265명 선발...개강 앞두고 오리엔테이션 열려

전북도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으로 추진하는 'JST(Jeonbuk Saemanguem Tech) 공유대학'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4학년도 JST 공유대학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선발학생

200여명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JST 공유대학 주관대학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 운영 주체인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본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사업단장 등이 참여했다.

3월 4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신청 안

내 및 학사관리시스템(LMS) 이용방법, 장학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JST 공유대학은 '도내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가상 대학'을 말한다.

2024학년도 첫 출발을 하는 JST 공유대학은 전공심화과정에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의대, 전주비전대, 전북과학대 등 10개 참여대학의 일반대 비이공계 또는 전문대 재학생 200명을 선발했다.

전공심화과정 1학기 교과목은 총 33개 과정으로 미래수송기기 12개, 에너지신산업 9개, 농생명·바이오 12개가 개설됐으며, 기초전공과정은 전공심화과정 중 초급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JST 공유대학 학생 전원에게는 '혁신인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과 별도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전공심화과정이나 기초전공과정에 상관없이 9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학기당 200만원(월50만원), 6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학기당 120만원(월30만원), 3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학기당 80만원(월20만원)이 지급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형 공유대학은 대학과 학과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참여가능한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이라며 "공유대학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는 기업을 유치해 전북을 일으킬 새로운 미래산업을 속도감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대학은 기업과 청년을 연계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2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4학년도 JST 공유대학 오리엔테이션'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운영 주체인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본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사업단장, 선발학생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참여하세요”

전북자치도, 특화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육성-후속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4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2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도내 1년 이상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10개사(신규 8개사, 사후관리 기업 2개사)를 선발해 창업기업의 성장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광범위했던 지원 대상을 이차전지, 농생명바이오 등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분야로 집중해 창업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기업당 2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과 전담인력, 민간투자사 소속 심사역을 매칭해 심층면담을 통해 기업진단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스타트업 진단 솔루션' △기술성과 사업성의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데모데이'와 '모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며, 원활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지원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1년 단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수 졸업기업에게 입주공간 제공,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다음 단계의 정부지원사업과 투자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참여를 원하는 창업기업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event.jc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과 전담인력, 민간투자사 소속 심사역을 매칭해 심층면담을 통해 기업진단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스타트업 진단 솔루션' △기술성과 사업성의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데모데이'와 '모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며, 원활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지원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1년 단위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우수 졸업기업에게 입주공간 제공,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다음 단계의 정부지원사업과 투자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참여를 원하는 창업기업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event.jc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보건소 등 81곳 노후 시설장비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56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노후 시설, 장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7억원을 확보했고, 지역 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81개소에 총 56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 장비 노후와 수준,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완주군 소양보건지소 등 11개소는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방문자에게 쾌적한 환경, 편의를 높인다.

김제시 대동보건진료소 등 64개소는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최신식 의료장비 116대를 확충한다.

이 외에도 남원시보건소 등 6개소에는 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7대를 구입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의료서비스 등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기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실현 위한 첫 종합계획 나온다

먹거리 돌봄, 탄소중립 등 복지·생태환경까지 먹거리 정책 확장

6대 추진전략·18개 핵심과제·80개 사업 2028년까지 7900억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중훈 경제부지사(공동위원장), 전북자치도교육청 박주용 부교육감(공동위원장), 전북먹거리연대 이세우 대표(민간공동위원장), 먹거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수립하는 광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은 기존 지역먹거리 공급에서 먹거리의 복지·건강·교육·환경까지 확장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먹거리 순순환 체계 구축'의 비전으로 6대 추진 전략과 18개의 핵심과제, 80개 사업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7,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영역으로는 생산·유통·소비, 복지·돌봄, 교육·홍보, 생태·환경, 정책·협력 총 6개를 설정했고, 영역에 따른 추진전략은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역먹거리 공급확대,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먹거리 공감대 확산, △먹거리 탄소중립 강화, △정책 실행력 확립이다.

2028년까지 성과목표는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2,800명,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비중 70%이상, △지역먹거리 돌봄사업 4개 시군 모델화,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1,700ha, △전 시군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세웠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1년 말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1월 광역단위 최초 먹거리정책 현안 실행 조직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같은 해 6월, 민관협치의 먹거리 위원회 출범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본 계획의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향후에는 본 계획에 따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민으로만 구성된 '먹거리 속의기구'를 설치하여 다수도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부서간 '먹거리정책 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통합·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먹거리 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해 정책을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요구

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도의 첫 먹거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모든 도민이 먹거리에 소외받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꾸준히 관리·감독하고, 우리 도의 지역먹거리 정책이 언제나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 이세우 민간공동위원장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 광역 먹거리 통합센터 설치, 위원회 출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행정과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도민도 지역먹거리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